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자료</h1>	2016. 2. 13(토)	
		작성 문의	합동대책반 과장 박용우 (Tel. 010-6319-7225)
<p>즉시 사용</p>			

정부 “기업 피해규모 몰라” 개성공단 사전대책 없었다 (한겨레, ‘16.2.13 보도관련)

□ 주요 보도내용

- 합동대책반 꾸렸지만 현황 감감
- 대출상환·세금 유예 등 땀질 대책
-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

□ 보도해명

① 정부는 피해기업을 위한 합동대책반까지 꾸렸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

⇒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기업별 애로와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및 물자의 철수(2.11일) 직후에 기업별로 1대1 지원전담팀을 통해 실태파악을 시작(2.12일)하는게 수순이었음.

* 입주기업의 애로는 원청기업 납품관련, 인력부족, 해외판로 개척, 자금조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기업별로 달리 나타나므로 사전적 파악이 불가능

② 피해기업 지원대책 역시 대출상환, 세금·공과금·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되뇌는 수준에 그쳐

⇒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·시행한 것임.

⇒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입주기업별 1대1 전담을 통한 애로와 실태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임.

③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 구성

⇒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(2.10일) 직후, 정부 합동대책반과 현장기업지원반, 1대1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였고(2.11일), 2.12일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접촉과 애로파악을 시작함으로써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음.

□ 정부는 앞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.